

사회탐구 영역(정치와 법)

제 4 교시

성명

수험 번호

3

제 [] 선택

1

1. 정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가 여러 차례 토론회를 거쳐 교칙을 개정하는 과정을 정치로 볼 수 있을까요?



정치는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 공동체의 목표 실현을 위해 구성원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례를 정치로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정치는 정치권력을 형성하고 정책을 결정하여 집행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국가만의 고유한 현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례를 정치로 볼 수 없습니다.

- ① 갑의 관점은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 ② 을의 관점은 국가의 정치 현상과 사회 집단의 정치 현상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본다.
- ③ 갑과 달리 을의 관점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해결책을 국가에 요구하는 시민 단체의 집회 활동을 정치로 본다.
- ④ 을에 비해 갑의 관점은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 ⑤ 갑, 을의 관점 모두 국가 형성 이전에 나타난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2.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은 수감 중 제기한 헌법 소원 심판의 변호사와 접견하고자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접견실에서의 접견을 교도관에게 요청하였으나 수용자는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만 접견하게 하는 ○○법 시행령 △△조항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갑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며 헌법 재판소에 해당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가)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는데도, 수용자가 일률적으로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변호사와 접견하도록 한 것은 필요 최소한의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헌법 재판소는 ○○법 시행령 △△조항이 변호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효율적인 재판 준비를 곤란하게 하여 갑의 재판을 받을 권리인 A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 보기 >

- ㄱ. (가)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유형의 헌법 소원 심판이다.
- ㄴ. A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권리이다.
- ㄷ. A는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 ㄹ. 헌법 재판소는 ○○법 시행령 △△조항이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갑의 A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우리나라 헌법 기관 A ~ 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교사: 우리나라 헌법 기관의 권한에 대하여 발표해 볼까요?

갑: A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합니다.

을: B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병: 상고심을 관할하는 C는 D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정: B 소속의 헌법 기관 E는 매년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검사를 담당합니다.

교사: 모든 학생이 옳게 발표했습니다.

- ① A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이다.
- ② B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 ③ C는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 ④ D는 국회 의원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재판권을 가진다.
- ⑤ E는 국정 감사 및 조사권을 가진다.

4. 다음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부각되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고용 노동부는 집중 호우로 인한 특별 재난 지역에 대해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하도록 일자리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졸업 때까지 매월 장학금을 지원하고 진로·진학 컨설팅, 마음 건강 진단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① 국민의 사회권 보장을 통한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강조한다.
- ②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근거가 된다.
- ③ 헌법 개정 시 필수적으로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하는 근거가 된다.
- ④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 ⑤ 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 활동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다.

5.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정치와 법 온라인 클래스

수업 자료 묻고 답하기

학생: 법치주의의 발전 과정이 궁금해요.

↳ 교사: 초기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 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었다면 그 내용이나 목적을 문제 삼지 않았는데 이를 A라고 합니다. A가 합법적 독재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과 목적이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는 B가 대두되었습니다.

< 보기 >

- ㄱ. A는 법률의 내용이 인간의 존엄성에 합치해야 한다고 본다.
- ㄴ. A는 입법자에 의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ㄷ. B의 실현 방안으로는 위헌 법률 심사제가 있다.
- ㄹ. B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보다 통치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치와 법

2 (정치와 법)

사회탐구 영역

6. 민법의 기본 원칙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A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형성된 계약 관계에 국가가 간섭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제조자와 소비자 등의 관계에서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나타나는 경우 국가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계약 당사자 간의 교섭력을 대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등장한 B는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더라도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내용의 계약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 보기 >

- ㄱ. A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 ㄴ. 근로 계약 체결 시 최저 임금법에 근거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것은 A를 제한하는 것이다.
- ㄷ. B는 사유 재산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을 인정한다.
- ㄹ. B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강자의 부당한 대우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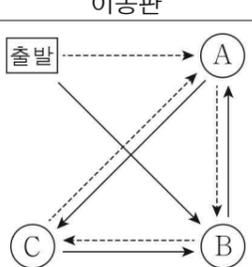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다음은 정치와 법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 방 탈출 게임에 관한 자료이다. 자물쇠의 비밀번호로 옳은 것은?

< 방 탈출 게임 >

이번 방 탈출 주제는 '범죄의 성립 요건'입니다.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 갑 ~ 정의 행위에 대한 질문을 순서대로 읽고, 규칙에 따라 이동판의 이동 경로를 자물쇠에 입력하여 방을 탈출하세요.



규칙	이동판
질문에 대한 응답이 '예'라면 실선 화살표 방향으로 한 칸만 이동하고, '아니오'라면 점선 화살표 방향으로 한 칸만 이동한다.	

순서	질문
1	도서관에서 타인의 휴대폰을 훔친 갑(12세)의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가?
2	범죄 현장에서 현행범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한 경찰관 을(47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가?
3	가족의 생명에 대한 저항할 수 없는 협박을 받아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병(52세)의 행위는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가?
4	침수 현장에서 건물에 갇힌 사람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건물 창문을 깨고 들어간 시민 정(35세)의 행위는 긴급 피난에 해당하는가?

- ①

A	B	A	B
---	---	---	---

 ②

A	C	A	B
---	---	---	---

 ③

B	A	B	A
---	---	---	---
- ④

B	C	A	C
---	---	---	---

 ⑤

B	C	B	A
---	---	---	---

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갑은 을과 이삿짐 운반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의 직원 병은 을의 이삿짐을 운반하다가 본인의 과실로 행인 정에게 상해를 입히고 을의 기물까지 파손하였다. 한편 이삿짐을 정리하던 을의 자녀(13세)는 베란다에서 책에 쌓인 먼지를 털다가 실수로 책을 베란다 밖으로 떨어트렸고, 이로 인해 주민 무의 자동차 유리가 깨졌다.

- ① 병은 을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 ② 갑이 정에게 사용자로서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 병은 정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갑이 병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더라도 갑은 정에게 사용자로서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④ 을의 자녀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을은 무에게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⑤ 을이 무에게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 을의 자녀는 무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9 ~ 10]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청소년 영화제 우수작 '환경에 정치를 담다' 소개

주요 인물 소개

- 갑: 지역 문제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으로 정치인을 꿈꾸고 있다.
- 을: 최근 지방 선거에서 A로 당선되어 활동 중이며 봉사 정신이 투철하여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줄거리

교지 편집부 기자로 활동 중인 갑은 지역 문제를 취재하던 중 공장의 폐수로 인해 하천이 오염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에 갑은 지역 문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 환경 보호 단체에 가입하여 ㉡ 국회 앞에서 캠페인 활동을 한다. 이를 취재하러 온 ㉢ 언론 기관과의 인터뷰에서 갑은 을에게 ㉣ 폐수로 인한 하천 오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한다. 이를 알게 된 을은 ㉤ 폐수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폐수 처리 시설 설치 비용을 포함하여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안을 편성한다. B는 을이 편성 후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여 확정한다.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지방 자치 단체 기관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9.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A는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B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권한을 가진다.
- ③ A와 달리 B는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④ B와 달리 A는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사무 감사권을 가진다.
- ⑤ A와 B는 수직적 권력 분립 관계에 있다.

10.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기 >

- ㄱ. ㉠과 달리 ㉡은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한다.
- ㄴ. ㉢은 의제를 설정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 ㄷ. ㉣은 정치 과정에서 산출에 해당한다.
- ㄹ. ㉤은 정치 과정에서 투입에 해당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밑줄 친 'A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법은 2016년 3월 제정되어 같은 해 9월부터 시행되었다. ○○법에는 보험 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갑은 입원 진료에 필요하지 않음에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취득한 행위로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서 갑이 ○○법 시행 전에 행한 보험 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한 행위에까지 ○○법을 적용하여 처벌한 부분이 죄형 법정주의의 A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 ① 범죄와 형벌이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② 형벌 법규의 소급 입법 및 적용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 ③ 범죄와 형벌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④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⑤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내용을 가지는 법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1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은 을과 혼인 후 A를 낳고 살다가 생활필수품 구매를 위해 친구 병으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사용할 만큼 경제적 문제가 지속되자 결국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 이혼하였다. 한편 정과 무는 B와 C를 낳고 살았으나 무의 부정한 행위로 이혼하였으며 B는 정과, C는 무와 살기로 결정하였다. 몇 년 뒤, A를 홀로 양육하던 갑은 정과 혼인하였으며 정은 A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이후 무가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하면서 갑은 B와 C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 ① 갑과의 혼인 기간 동안 을은 갑이 병에게 빌린 생활필수품 구매 비용을 갚을 의무가 없다.
- ② 갑과 을의 이혼은 가정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③ 무는 정과의 이혼 시 혼인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정이 A를 입양함에 따라 을과 A의 친자 관계는 종료된다.
- ⑤ 입양으로 인해 B, C 모두 갑과 정 의 혼인 외 출생자로 간주된다.

1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게임기 매장을 운영하는 갑(43세)은 을(17세)과 고가의 게임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은 을과의 계약 당시 을이 미성년자임을 몰랐으나 다음 날 우연히 알게 되었고, 을의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이 진행되었음을 깨달았다. 며칠 후 갑은 동일한 모델의 게임기를 구매하려 온 병(16세)에게 미성년자인지 물었고 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시하였다. 갑은 이를 신뢰하여 병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동의서는 사실 병이 위조한 것이었다. 한편 정(16세)은 같은 반 친구 병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게임기를 자신에게 팔 것을 요청하였고, 병은 이를 승낙하였다. 다음 날 정은 병의 계좌로 약속한 금액을 송금하였다.

- ① 갑은 을에게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 ② 을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갑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③ 갑과 병의 계약은 무효이다.
- ④ 갑은 병에게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 ⑤ 병과 정 의 계약은 정이 병의 계좌로 약속한 금액을 송금한 시점에 성립한다.

14.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국제 연합 헌장에 규정된 어떠한 사항도 토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해 회원국이나 B에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A의 결의는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의결 기관임에도 현실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반면 B는 국제 평화와 안전에 관한 일차적 책임을 부여받은 기관으로서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① A에서는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른 표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② B에서 절차 사항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대한 결정은 상임 이사국 전체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 ③ A와 달리 B는 국제 사법 재판소 재판관을 선출하는 권한을 가진다.
- ④ B와 달리 A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군사적 개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⑤ B의 모든 이사국은 A에서 정기적으로 선출된다.

1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국, 을국의 의회는 각각 지역구 의원 100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갑국, 을국 모두에서 각 정당은 선거구별로 1인의 후보자만 공천하고, 각 선거구에서 다른 후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며 선거구마다 선출되는 의원 수는 같다. 갑국, 을국 모두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 의회 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존재하였다. 한편 갑국, 을국은 차기 선거를 앞두고 현재 의회 의원 정수(定數)를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분	갑국	을국
의원 수	지역구 의원: 90인 비례 대표 의원: 10인	지역구 의원: 20인 비례 대표 의원: 80인
지역구 의원 선거 제도	선거구 수를 30개로 축소하고, 선거구별로 같은 수의 의원을 득표순으로 선출함.	선거구 수를 20개로 축소하고, 1차 투표 결과 과반 득표한 후보자가 없으면 상위 1위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그 중 과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함.
비례 대표 의원 선거 제도	각 정당의 지역구 후보들이 선거구 전체에서 획득한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함.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별도의 정당 투표를 실시하여 각 정당의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함.

* 갑국, 을국에는 각각 5개의 정당만 존재하며 갑국, 을국 개편안의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은 선거구별로 1인의 후보자만 공천함.
** 개편안 적용 시 투표율은 100%이며, 무효표는 없다고 가정함.

< 보기 >

- ㄱ. 갑국 개편안의 지역구 의원 선거구제는 우리나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거구제와 같다.
- ㄴ. 갑국에서 개편안 적용 시 정당 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와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 간에 투표 가치의 불평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ㄷ. 을국 개편안의 지역구 의원 선거 대표 결정 방식은 현행에 비해 선거구 내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 ㄹ. 을국과 달리 갑국에서는 개편안 적용 시 특정 정당이 의회 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정치와 법)

사회탐구 영역

16. 국제법의 법원(法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조약, 국제 관습법 중 하나임.) [3점]

국제 사회에서 국가가 처음부터 국제 규범을 만들려는 목적에서 행동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체로 국가는 일차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정한 행동이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이것이 국제 사회에서 법적 확신을 얻어 효력을 가지면 A로 성립하게 된다. 근대 국제법 발달에 있어서는 A가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국제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 많아지자 B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원칙적으로 B는 체결 당사자 간에만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일단 발효되면 합의의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할 수 없다. 이에 합의 이행에 대한 높은 기대와 신뢰를 발생시켜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 ① A는 명시적 입법 절차를 거쳐 성문화된 형식으로만 존재한다.
- ② 우리나라에서 A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체결·비준한다.
- ③ B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는 체결할 수 없다.
- ④ 우리나라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B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⑤ A의 예로 생물 다양성 협약, B의 예로 국내 문제 불간섭이 있다.

17. 정치 참여 집단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임.)

최근 의회 의원 선거에서 A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갑은 국가가 지정한 동물만을 수입하자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에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B는 해당 법률안이 생태계 교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동물 판매업계 종사자로 구성된 C는 국내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동물의 수입까지 규제하여 자신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며 지정 기준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 ① A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 ② B는 자신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 ③ C는 비영리 조직으로서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한다.
- ④ A와 달리 B는 당정 협의회를 통해 의회와 정부를 매개한다.
- ⑤ C와 달리 A는 구성원들의 특수한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된다.

18.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의 시기별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은 t 시기, t+1 시기에 모두 A당이다. 표는 갑국의 t 시기, t+1 시기의 정당별 의회 의석률, 행정부 수반 선출 방식을 나타낸다.

구분	정당별 의회 의석률(%)			행정부 수반 선출 방식
	A당	B당	C당	
t 시기	40	35	25	국민이 선거를 통해 직접 선출함.
t+1 시기	55	5	40	의회에서 선출함.

* 정당은 A ~ C당만 존재하며, 무소속 의원은 없음.
** 각 시기의 정부 형태는 해당 시기 내에서 동일하며, 각 시기 내 정당별 의회 의석률은 변함이 없음.

- ① t 시기에는 여대야소 정국이 나타난다.
- ② t+1 시기에는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
- ③ t 시기와 달리 t+1 시기에 의회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
- ④ t+1 시기와 달리 t 시기에 연립 내각이 구성된다.
- ⑤ t+1 시기와 달리 t 시기에 행정부 수반은 의회 해산권을 가진다.

19.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금주의 주요 뉴스	
□□	은행 직원 A, 고객 정보 유출 혐의로 구속 기소
산불	방화범 B,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의 원심 판결 확정
뺑소니	운전자 C, 징역 1년 판결에 검찰 “형량 가볍다” 항소
◇◇	기업 회장 D, 횡령 혐의로 구속 ... 법원 “증거인멸 우려”
유명 방송인 E,	폭행 누명 벗었다 ... 검찰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 ① A는 기소된 후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법원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2심 법원은 B에게 유예 기간 동안 일정한 범행이 없으면 공소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③ C가 항소를 포기한다면 C에게는 당해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A, D 모두 검사의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청구로 법관의 심문을 거쳐 구속되었을 것이다.
- ⑤ B, E 모두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면 B와 달리 E는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용자 갑은 경영 악화라는 이유를 내세워 폐업을 공고하고 을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 을은 이 해고가 자신이 소속된 노동 조합을 와해하기 위한 ‘위장 폐업’을 이유로 한 것이라며 △△ 지방 노동 위원회에 부당 해고,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다. △△ 지방 노동 위원회는 해고가 계속된 경영난으로 이루어져 정당하고, 갑의 부당 노동 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확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이에 불복한 을은 중앙 노동 위원회에 △△ 지방 노동 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 노동 위원회는 갑이 노동조합 활동을 배척하고자 진정한 폐업 의사 없이 폐업하여 을을 해고하였고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여 기존과 유사한 방법으로 기업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을의 재심 신청을 모두 인용하였다.

< 보기 >

- ㄱ. 을이 속한 노동조합은 부당 노동 행위를 이유로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ㄴ. 을은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것과 별도로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ㄷ. △△ 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이 을을 해고한 것이 부당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 ㄹ. 중앙 노동 위원회와 달리 △△ 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이 을을 해고한 것이 을의 근로 3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정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